

한반도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모색

이 병 철

사회과학부 행정학 전공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남북의 대내·외적 환경을 특히 경제여건에 중점을 두어 시의성 있게 분석·평가하고, 남북경제협력이 남과 북의 자원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임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 남북의 경제적 요인이 남북경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평가한 후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A New Direc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of South-North Korea Under the Asian Economic Crisis

Lee, Byung-Chul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As an effort to overcome the resource scarcity problem facing the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current economic situation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realities of Asian economic crisis, the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situations on their economic cooperation and suggests a new policy direction which promotes a desirab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It is a positive sign that the North Korea is trying to arrive at solutions to its

economic difficulties through cooperation with South Korean business corporation. To sec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is required to demonstrate a sincere commitment to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while South Korea needs to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North Korea within the terms of the framework.

1. 글을 시작하면서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과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은 기존 해 온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시작된 아시아금융위기는 작년 말에 한국의 경제를 강타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환유동성부족으로 국가부도의 위기국면이 조성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통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한국은 엄청난 정치·경제·사회적 고통과 회생을 감내하면서 한국경제의 문제점 해결과 재도약을 위한 고통스런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역시 1990년 이후 지속되는 마이너스 경제로 대변되는 경제침체와 1995년 부터 몰아닥친 홍수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한국은 대외개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구조조정등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와 국가신인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 시키고 있는 반면 북한은 폐쇄체제를 유지한채 부분적이고 계산된 개방과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그 체제가 지니고 있는 대남군사력우위에 무게를 실으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 제네바핵합의파기나 미사일개발과 같은 폭발성 이슈로 압박을 가하는 바람끝 외교전략을 통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한 처방전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¹⁾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9년 이래 교역실적이, 1994년의 북한핵 위기나 1996년의 북한잠수정침투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간장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북한이 압박외교를 통해 미국·일본과 관계개선을 이룩하고 그들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경우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 있는 한국에 대한 교역의 매력을 잃게 될 우려도 없지 않은마치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김일성사후의 북한체제를 위기관리적 차원에서 유지해야 하는 김정일의 입장에서 개방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체제우선적 사고에 비중을 더욱 둘 것이므로 이런 경직된 사고가 남북경제교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잠수함을 통한 해상침투 등 대남(對南)

1) 영변지역에서 핵관련시설로 의혹을 받은만한 대규모 지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98년 8월 31일 정오 농해에서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발사와 94년 제네바핵합의의 파기가능성을 담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경고 등은 김정일이 정권안정 차원에서 핵무기를 위시한 압박적 방법으로 미국과 흥정을 벌여 돈을 얻어내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에머슨(Tony Emerson), 「뉴스위크」, 1998. 9. 2. 통권 344호.; 미국은 1996년부터 미사일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미사일개발을 동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동북아안보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은 이에 자극받아 미국과 함께 진역미사일방어시스템(TMD)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 참여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기로 하였다. 내년에 360만달러가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한다. USA TODAY, 1998. 8. 31.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8월31일에는 '광명성 1호'로 이름붙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바 있다. 한국 새정부의 “햇볕정책”과 금강산관광무드에 가려져서는 안될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²⁾ 또한 한국내에서는 새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보·혁갈등이 노정되어³⁾ 대북경제협력에 대한 시각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북한 역시 개방을 지지하는 개혁·유화파와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강경파간의 갈등으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이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기인되는 요인들로 인해 당분간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어려면에서 많은 우여곡절과 파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북의 대내·외적 환경을 특히 경제여건에 중점을 두어 시의성 있게 분석 평가하고, 남북경제협력이 남과 북의 자원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임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 남북의 경제적 요인이 남북경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평가한 후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여건의 변화 분석

미국이 주도가 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체제 출범과 유럽 국가들에 의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의 모색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 각국의 지역적 경제블록화는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더욱 강화, 확산시켰다. 클린턴행정부가 우선적 정책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인권문제를 후퇴시키면서까지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기간을 연장해 준 결정은 바로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의 일면을 잘 반영해 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세계는 경제로 대변되는 국익을 우선시 하는 철저한 실리위주의 정치체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지리적으로 거대한 세계의 경제이해관련국들이 자신들이 처한 여건과 형편에 따라 다종다양한 형태의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의 형태를 띄고 출범한 “북미자유무역지역(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 NAFTA),”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공동시장의 형태를 띄면서 연합국가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일본, 신흥공업국(NICs)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의 형태를 띄고 있는 “아·태경제협력회의(Asia Pacific Economic

2) 96년 9월에는 나진·선봉 부자설명회를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해안에 잠수함을 침투시켰다. 지난 6월 22일에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태방북’ 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시 속초 앞바다에 잠수정을 침투시키는 이층성을 보였다.

3) 26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햇볕론’을 놓고 여야, 여여간에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용갑의원과 자민련 변용진의원은 ‘안보 우선, 햇볕론 재고’를 주장했고, 국민회의 유제진 의원은 햇볕론을 옹호했다. 김용갑 의원은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가 93년 5월 “북한에 따뜻한 햇볕을 쬐어 웃으며 옷을 벗게 하겠다”고 한 발언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실패한 햇볕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느라 국가 안보를 뒷전에 밀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안보-대북관에 의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김 총리를 믿고 김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총리직을 걸고 햇볕정책을 폐기시키라”고 주문했다. 김의원은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연간 15억달러가 북한에 흘러들어가 군사비로 전용될 것”이라며, 정부측에 금강산 관광사업의 포기를 촉구했다. 변용진 의원은 “안보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며 통일은 그 다음의 문제”라며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조선일보」, 1998. 8. 27.

Cooperation : APEC)”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계의 거대 경제블록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 경제전쟁에서의 비교 및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재에도 치열한 접전(head to head competition)을 벌이고 있으며 각 블록은 나름대로 세계적인 자유무역과 범세계적 경제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⁴⁾

로즈크레인스(Richard Rosecrance)는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개념이 지금까지는 무력적인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서 규정되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무역을 중심으로한 경제력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착상의 전환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요가치로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써로우(Lester Thurow) 역시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무역을 축소하거나 억제했던 1930년대의 무역장벽과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나 정부에 의해 관리(managed trade)되는 준무역장벽(quasi trading blocks)이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간의 교역을 차별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⁶⁾ 시각차이에 따라 평가는 다를 수 있겠으나 분명한 점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질서는 자국의 국가이익우선주의라는 명제하에 경제적인 지역패권주의로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포성없는 냉혹한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새로운 세계에 적응키 위한 체제개혁과 발상 및 사고의 대전환이 국가생존을 위해 각 국가별로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도 한반도지역은 냉전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채 남과 북의 무한소모적인 갈등구조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여·야격들의 난맥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소용돌이속으로 표류하고 있으며 국가규제와 민간창의성의 실종에 의한 한국경제는 과거의 기록적인 성장을 뒤로한채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표1 참고)

(표1)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GNP

(단위: %, 달러)

연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경제성장률	5.6	2.2	9.1	9.6	5.8	12.7	6.6	11.3	13.8	7.6
1인당 GNP	82	87	100	103	105	125	142	169	210	253
연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경제성장률	8.0	4.6	12.6	8.0	6.1	11.9	10.1	9.4	6.8	-3.9
1인당 GNP	289	319	396	541	594	802	1,011	1,400	1,647	1,597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경제성장률	5.5	7.5	12.2	8.5	6.6	11.9	12.3	12.0		
1인당 GNP	1,741	1,834	2,014	2,187	2,242	2,568	3,218	4,295		

*주 : 기준년도 1975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4) 그러한 한 예(例)로 유럽연합은 미국이나 일본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유럽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기술개발투자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유레카(Eureka)나 제시(Jessi), 비전(Vision) 1250, 그리고 에스프리(Esprit)같은 범유럽의 기술개발 컨소시엄 결성 등도 정부차원의 직접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5) Richard Rosecrance,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86)

6) Lester Thurow, *Head to Head: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2)

분명 우리의 경제는 신속한 처방을 필요로 할만큼 증병을 앓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강구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앞서 적시한바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과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과 모순, 그리고 이러한 것에 의한 방향감각의 상실 탓이 아닌가 사료가 된다. 계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이를 잘 입증하는 지표라 말 할 수 있다.⁷⁾ 그나마 요즈음 들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로 다시 한번 3저(低)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는 사실과 올 2분기 들어 수출이나 산업생산활동 등 각종 경제관련지표들이 미진하게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호기도 우리의 지혜로운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오히려 위기로 반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환경은 세계대공황이 엄습할지도 모른다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지극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의 냉혹한 국익추구행위에 의해 한치도 앞을 내다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여건은 한국에겐 커다란 시련으로 와 닿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여럿 존재 할 수 있겠으나 남북신뢰성회복과 긴장완화를 통해 남북통일이란 민족적 숙원을 성취하면서도 자원을 공동화하여 상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더 이상 비개방적인 자세로 나갈 경우 체제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듯 싶다. 북한의 커다란 후원자였던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종전까지 미국과 일본에 대해 갖었던 적대적 자세를 상당히 누그러뜨리면서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내적으로는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경제적 모순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90년대 이후부터는 엄청난 경제적 파탄을 맞보고 있다.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경제는 엄청나게 피폐되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식량난까지 가중되어 서방적인 시각에서 볼때에 북한은 더 이상 국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북한의 국민총생산(GNP)은 90년대 들어 2백억 달러에서 1백억 달러로 떨어졌으며 공장 가동률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노동자들은 기계를 뜯어 고칠로 내다 팔 궁리를 하고 있고 탄광이 폐쇄됐으며 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한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올해 초 북한 인구는 2천2백만 명으로 예상치보다 2백만 명이 적었는데 이 누락된 2백만 명 대다수가 먹을 것을 찾아 북한 전역을 헤매거나 중국으로 탈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정보관계자들의 짐작이라 한다. 최근에 북한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간 미국 하원 대표단은 95년 이래 기아로 숨진 북한 주민이 90만~2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대표단의 마크 커크는 북한의 생활환경을 ‘중세기 수준’ 이라고 표현했다.⁸⁾ 북한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한편으로는 미사일 등의 군사무기수출과 밀수 등을 통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외교적 압박수단을 통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에서 찾

7) 1994년 9월과 1996년과 1997년 5월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는 이런 사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보고서들에 따르면 1994년 한국의 경쟁력수준은 41개 조사대상국중에서 종합순위 24위에 불과하였으며 1997년에는 평가대상 46개국중 중·하위권인 30위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지난해의 27위보다 3단계 더 떨어진 것이다. 이에 반해 4마리의 작은 용으로 우리와 어깨를 같이하고 경쟁을 했던 싱가포르는 2위, 홍콩은 3위이며 타이완은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보다 후발국인 말레이시아가 17위를 차지하고 있고 타일랜드가 29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문제를 심각화시키는 것은 세계화를 선도해 나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1994년 기준으로 41개국중에서 30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홍콩은 일본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이완 역시 한국을 앞지르고 있고 더욱 개탄할 일은 말레이시아나 타일랜드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점이다. 작년에 우리경제는 엄청난 무역적자로 주름살이 깊히 패인바 있지만 오히려 타이완은 흑자잔치로 몸살을 앓은바 있다.

8) 에머슨(Tony Emerson), 「뉴스위크」, 1998. 9. 2. 통권 344호.

으려 하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해결이외에 북한이 노리는 바는 이러한 관계정상화가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의 체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유일 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강온전략을 구사하면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앞서 논의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몸을 내 던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세계의 경제환경은 한국과 북한의 입맛에 맞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적응의 성패여하에 따라서는 파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선부른 세계화는 현상황을 보다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세계화를 지향하되 남북한간의 상호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체제를 강구하는 것도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변화에 신속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위상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간의 경제통합 그리고 통일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남북한의 경제환경분석

1) 한국의 경제환경분석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누적된 경제구조의 모순과 작년에 밀어닥친 한보와 기아사태로 인해 결국 국가부도위기상황까지 치달으면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까지 전락하여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대외적인 국가신인도 역시 수직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⁹⁾ 경제성장률은 올해 들어서면서 마이너스로 일찌감치 돌아섰고 내수 위축과 기업들의 투자 축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¹⁰⁾ 그나마 성장의 잠재력인 산업기반까지 송두리채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와 위기의식이 팽배되고 있는 것도 요즈음의 현실이다. 여기에서 러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모스크바발 세계 공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급락해버린 한국의 신용도까지 덩달아 더욱 추락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국내외 여건은 최악의 상황이라 말해도 지나침이 없다. 경제연구소들은 일제히 "경기는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도 성장률, 소비, 투자 등 각종 지표가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경제공황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디플레이션 수렁에 빠질 가능성¹¹⁾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¹²⁾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참조)

9) 영국에서 발행되는 유럽의 유력 경제지인 「유로머니」 지(誌) 9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컨트리리스크(국가위험도 또는 국가신용도) 평가 순위는 지난해 3월 1백80개국중 22위에 위치했으나 지난해 9월 27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12월 30위로 각각 떨어진데 이어 이번조사에서는 34위로 또다시 하락해 경제위기를 전후한 1년반 사이에 12단계나 떨어졌다. 『조선일보』, 1998. 9. 22.

10)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기준 -4%보다 낮은 -5에서 -6%로 내려갈 전망이다. 올해 GDP성장률이 현대자동차의 파업사태, 수해,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했던 전망치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 1998. 8. 26, A1면.

11)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통화정책 기초실정에 대한 견해'라는 보고서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급락하면서 큰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이와함께 원-달러 환율이 하락 하는 최근의 현상은 전형적인 초기 디플레이션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1998. 9. 3.

12) 『주간조선』, 1998. 9. 3.

(표2) 각 민간경제연구소의 1998, 99년 경제지표추정치

구 분	98년				99년			
	삼성	대우	LG	현대	삼성	대우	LG	현대
경제성장률(%)	-6.4	-6.1	-5.3	-5.1	2.2	-3	1.9	-1.7~2.7
경상수지(억달러)	357	396	392	356	154	254	221	218~243
실업률(%)	8.2	7.3	7.0	7.5	8.7	7.9	8.2	7.5~11.3
소비자물가 상승률(%)	8.1	8.6	7.9	8.3	5.2	4.5	3.5	4.2~7.2

자료 : 『동아일보』, 1998. 8. 26., B2면.

삼성, 대우, LG, 현대 등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와 국제통화 기금이 합의한 -4%보다 더 떨어진 -5%에서 -6%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¹³⁾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기업들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경색이 심화돼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전망치(-5.3%)보다 크게 떨어진 -7.4%로 전망했으며 LG경제연구소도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상반기전망치(-4.6%)보다 낮은 -5.8%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연구소들의 이같은 어두운 전망치는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과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대외적인 요인과 전국적인 폭우,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 불안요인이 복합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상반기중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 일단락 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다소 호전된 -3%에서 2.2%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삼성경제연구소는 이같은 반등세는 경쟁력회복에 따른 실질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서 -6%에 이르는 등¹⁴⁾ 극심한 침체국면을 보인데 따른 단순한 반등으로 해석하여 올 하반기 우리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지속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호전되지만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도 실업률은 올해(8.2%)보다 더 늘어난 8.7%로 실업자수가 2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¹⁵⁾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7월 중 실업률이 7.6% (계절조정치는 8.6%)를 기록, 지난 1966년 이후 3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총 실업자수도 1백65만1천명을 기록, 한달만에 12만 2천명이나 늘어났는데 이 수치에 따르면 올들어 하루 평균 4천7백명의 실업자가 증가 한 셈이라는 것이다.¹⁶⁾ 이외에 수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수입의 급락으로 인한 무역수지흑자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출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수출이 급전돌어 3개월째 감소세이고 7월에는 -14%까지 급락하였는데 이것은 1960년대 이후 처음있는 일로써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얹어주는 불길한 징조라 볼 수 있다.¹⁷⁾ 산업 생산 역시 7월중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부진을 보이면서 1년 전보다 12.9%가 감소했다. 그리고 7월 제조업 가동률 역시 63.7%를 기록하였다.¹⁸⁾ 한국전쟁 이래 최악이라는 지난 6월(-13.2%)보다는 감소폭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감소세가 10%

13) 『동아일보』, 1998. 8. 26., B2면.

14) 실제적으로 올해 2분기 성장률은 -6.6%로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가 크게 미쳤던 1980년 4분기의 -7.8% 이후 최저를 기록하였다. 『조선일보』, 1998. 8. 28., 1면

15) 『동아일보』, 1998. 8. 26., B2면.

16) 『조선일보』, 1998. 8. 27.

17) 『조선일보』, 1998. 8. 28., 6면.

18) 『조선일보』, 1998. 8. 28., 1면.

대를 상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크게 줄었다. 반도체 생산이 40%가까이 늘어나긴 했지만, 수출가격은 연초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 기업의 돈벌이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소비동향을 알 수 있는 도산매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17.4% 감소, 지난 80년 5월(-18.6%)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전년 동기보다 48.9%가 감소했다. 지난 6월(-52.6%) 보다는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투자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소비위축이 투자부진을 부르고 투자부진이 생산감소를 초래하고 생산감소가 소득감소를 가져오고 이것이 소비위축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이다.¹⁹⁾

삼성경제연구소는 "올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다만 올해 안에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해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러스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구조조정과 해외여건이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전제가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깔고 있다. 하지만 해외 여건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점점 더 우리에게 불리한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금융위기가 패닉(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러시아 사태가 해결책을 찾기 힘든데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는 등 세계경제가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 모스크바발 세계 공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 사태에 이어 일본 엔화 약세나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등 외부 요인이 악화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세계공황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손도 쓰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²⁰⁾

이러한 부정적인 한국경제의 미래전망은 한국이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런 조치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것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못지않게 북한도 경제난에 밀려 경제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남과 북의 자원의 상호보완성이나 세계무역기구 등과의 협상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간을 넘나들때 요구되는 관세의 불필요성 그리고 남의 자본·기술력과 북의 노동·자원력의 효과적인 배합가능성 이외에 무엇보다 중요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통일의 실현가능성 등이 한국에게는 커다란 매력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2) 북한의 경제환경분석

북한은 80년대 이후의 경제정체현상으로 한국과의 경제역량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²¹⁾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1986년 1월 1일에 행해진 '김일성신년사'에서도 기술혁신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의 확대, 발전을 크게 강조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나 북한은 1987년 4월에 확정하여 1993년까지 추진 해온 제3차 7개년계획²²⁾마저 실패로 끝남에 따라 이 계획에 의해 설정되었던 1994년에서 96년까지의

19) 『주간조선』, 1998. 9. 3.

20) 『주간조선』, 1998. 9. 3.

21) 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0년 이후 각 연도판과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0-1991, 1991-1992*, (London: IISS, 1990, 1991)를 참고할 것.

22) 이 계획의 주요 부문별 성장목표는 기간중 국민소득 1.7배(연평균 7.9%), 공업생산 1.9배(연평균 9.6%),

완충기정책의 성과나 주요과제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이며 이렇다 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완충기를 연장하는 경제마비상태를 보여주고 있다.²³⁾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북한은 최근 100만에서 200만이 아사했다는 보도가 나올만큼 심각한 식량난²⁴⁾(불론 1995년부터의 흉수라는 자연재해적 요인도 있지만), 그리고 생필품난과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생산시설의 노후화,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자본 및 외환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한 원자재난, 전력난²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1990년의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7%를 기록했고²⁶⁾ 1992년에는 더욱 악화되어 -7.6%를 기록하였으며 이런 마이너스성장은 7년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난을 해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85년부터 해외자본유치와 외화획득, 경제개발을 위해 합영법²⁷⁾이란 활로를 터 놓았으나 북한 경제가 지니고 있는 특이성과 경제구조를 둘러싼 환경적 특수성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와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해외자본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일본 조총련계열에 의한 합작투자정도로 자위하는 수준²⁸⁾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에는 한국에게도 직접 교류를 제의하는 강한 메시지를 간접경로를 통해 시사했고 두만강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한국측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바도 있다.²⁹⁾ 1991년 12월 28일에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³⁰⁾추진과 관련하여 북한

농업생산 1.4배(연평균 4.9%), 무역규모 3.2배(연평균 18.1%) 등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수행실적은 국민소득의 경우 목표대비 51.8%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경제성장목표를 연평균 7.9%로 설정했으나 실적은 매년 1.7%씩 감소, 종료년도의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기준년도인 1986년보다 오히려 12%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주요산업부문별 생산실적 역시 20-3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3년 12월 8일 개최된 당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경제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이 기간에 추진할 경제건설의 전략적 방침으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채택하였다.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4), 246-247면.

23)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7), 44-45면.

24) 1993년 북한의 쌀생산량은 1,260만섬인 반면 소비량은 2,030만섬으로 770만섬정도가 부족하다. 북한의 쌀재배면적은 61만 6천 헥타르(한국은 1백15만 7천)이며 10아르당 단수는 295킬로그램(한국은 456킬로그램)으로 재배면적이나 단위당 생산량에서 한국에 뒤지고 있다. 이러한 낮은 농업생산성이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앙일보』, 1994. 10. 30., 26면.

25) 남궁영, “북한의 대외경제정책과 남북경제협력전망”, 『남북한관계현황 및 95년 경제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4 6면.

26) 이동복, “북한급변은 전민족의 재앙”, 『월간조선』, 1991, 8월호, 133면. ; 『한국은행』, 1993.

27) 북한은 1984년 9월 진문5상 26개조의 「합영법」을 제정하여 서방자본주의국가를 포함한 세계각국회사, 기업소가 북한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였다. 합영기업이란 “한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가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윤의 공동분배, 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로 창설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경제사전』: 570) 북한은 합영법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1985년에 합영법시행세칙, 외국인소득세법 및 외국인소득세법시행세칙 등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조총련 및 소련과의 관계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외화부족문제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을 받았으나 그나마도 1989년도를 고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원, “앞의 책” 1992, 228-230면

28) 1986년 8월 조총련과 합영사업의 추진, 조정,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각각 60만달러씩 출자하여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하였다. 통일원, “앞의 책”, 1992, 229면.

29) 『동아일보』, 1991. 8. 9., 1면.

30) 300억달러규모의 두만강개발계획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남북관계불안으로 한국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일본 역시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분쟁때문에 러시아지역에 대한 인프라투자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며 러시아는 이 계획이 중국에 더 많이 될거라는 생각에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4. 11. 3. . p.1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랜 농민에서 벗어나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6월 남, 북한과 제3국 및 UNDP가 참여하는 구체적 협력사업으로 에너지효율화, 기후변화영향분석 등 11개의 사업을 제외와 정부관계부처가 이에 대한 참여방안을 협의중이라 한다. UNDP가 제외한 사업은 첫째, 북한내의 외국인 투자촉진 둘째, 에너지 효율화 셋째, 석탄유통 등 연료기술협력 넷째, 환경기준표준화 다섯째,

은 「선봉-나진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을 정무원결정 74호를 통해 공식발표³¹⁾함으로써 이러한 그들의 사정과 의도를 드러낸바도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핵개발의혹으로 무산되는 듯 하였으나 미·북간의 조건부핵타결이 이루어진 현재 새로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북한의 개방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기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여건은 조금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 최근의 국제통화기금 북한시찰단의 현장보고서(fact-finding report)³²⁾에 따르면 한마디로 '북한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92년 209억달러에서 96년 106억달러로 절반 가까이 격감했으며 특히 이 기간중 광공업생산은 무려 66%, 농업생산은 40%나 감소하여 북한에 심각한 식량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후 무역규모가 급속히 감소³³⁾,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채(약 120억달러) 상황에 어려움이 발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부문에 '주체'원칙을 깊숙이 적용한 결과,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당국은 현재의 위기를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는 편더멘탈적인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시스템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여러 문제점과 비효율성으로 오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소련의 붕괴,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요인들은 북한경제에 영속적인 충격을 주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잇따른 자연재해가 농업 생산량의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나, 이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부적절한 경제정책과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생산요소의 투입량 부족, 시설장비의 부족에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도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보다 실용주의적이며 전향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앞에서 말한 무역자유지대 설립, 농업부문에서의 물질적 인센티브 강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사회에 대한 물질적 기술적 지원요청 등에서 잘 드러 나고 있다.³⁴⁾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은 남북경제협력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분석, 여섯째, 해상오염 및 지역해양관리 일곱째, 생물다양성 현황과악 여덟째, 농촌지역 에너지재생 아홉째, 수자원기상정보교환 열번째, 환경감시 열한번째, 기술용어표준화제시이다. 『동아일보』, 1994. 10. 12, 2면

31) 『92 북한개요』, 1992, 161면.

32) IMF조사단이 작년 9월중순(6~13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작성한 첫 보고서로서 IMF이사회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되고 분석된 자료는 북한측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따라서 1996년의 주요 경제지표는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추정 한 경제지표와는 상당히 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33)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1986년에서 88년 기간중 매년 15%이상의 신장율을 보였으나, 1988년을 고비로 매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1986년의 증가율은 15.2%, 87년은 16.2% 그리고 88년은 26.3%였으나 89년 들어서면서 8.4%, 90년 1.7%, 91년 42.4%, 92년 2.2%, 93년 0.8%로 계속 하향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4), 250면.

34) 『조선일보』, 1998. 9. 22.

4.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모색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성숙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설정은 급격히 소용돌이 치고 있는 세계환경에서 그리고 현재 남북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에서 남북이 생존하려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대안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남북경제협력이 원활히 잘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이를 통해 남북의 경제력이 증대될 때 세계경제에서의 남북의 경제위상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민족이익이나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여 새롭게 짜여지는 블록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며 장차 다가올 정치통합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은 현재의 남북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으로써의 의미를 가지는 만치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고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로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능동적이고 전향적으로 적응

국가간의 상호교류와 의존에 대한 시각은 로스크레인스(Richard Rosecrance), 슈타인(Arthur Stein), 스튜워트(Michael Stewart) 그리고 왈츠(Kenneth Waltz) 등에 의해 이미 이론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고³⁵⁾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세계질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런 흐름속에 새롭게 형성되는 신국제질서에 따라 변모하는 세계환경은 더 이상 소모적이고 대치적인 남북한의 갈등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세계환경에 적응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한편으로는 블록경제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키 위해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노력이 절실하고 또한 환태평양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블록 결성과 이의 참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과의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세반문제에 있어 선의의 경쟁과 주권국가로서의 의연한 대응을 모색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반도문제에 있어 한국을 배제하는 전략과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커다란 축으로 하는 생존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우리를 앞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이에 초조해 하거나 좌절을 하여서는 안된다. 남북경제협력에 임함에 있어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적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세계경제환경의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판단하여 이에 부응하는 정책방향과 대

35) 이에 관한 이론적 도움은 다음의 책이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Richard Rosecrance,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New York: Basic Books, Inc., 1986); Richard Rosecrance and Arthur Stein, "Interdependence: Myth or Reality", in *World Politics* (July 1973); Michael Stewart, *The Age of Interdependence* (Cambridge, Mass.: MIT Press, 1984); Kenneth Waltz, "The Myth of National Interdependence", in Charles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1970); Lester Thurow, *Head to Head: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2); George Friedman and Meredith Lebard, *The Coming War with Japa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Peter F. Drucker,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Business, 1993)

안을 강구해 나간다면 미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한국배제전략에 대한 한국의 외교대응역량 강화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에 미온적인 입장을 타개하는 방안의 하나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강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에 의한 북한시장선점을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미·북관계개선과는 별도로 미국과 일본과의 기존 결속관계를 더욱 다지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북한에 대해서는 주변 4강의 외교채널을 통해 남북한간의 대화창구확보 및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나가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일본기업과 공동으로 북한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과 컨소시엄이나 합작방식으로 북한의 취약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대한 공동참여방식을 통해 북한에 진출하는 것으로 북한의 미온적인 경협태도를 회색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가장 호의적으로 대하는 중국³⁶⁾과 공동진출을 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문호개방의 제1차 협력파트너로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와도 협력을 하여 특히 경수로 건설이나 러시아와 인접한 나진, 선봉지구의 개발에 공동참여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를 통한 해법의 강구

북한의 내부사정이 유동적이고 김정일체제가 걸으므로는 안정을 찾은 듯 하나 내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불안정한 면이 없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유연전략을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³⁷⁾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포용하려는 “햇볕정책”으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남북정부간의 불신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거부감이 덜하고 북한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은 민간기업을 교류의 첨병으로 활용하여 남북경협의 교두보를 쌓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북출신기업인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³⁸⁾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판 로데오라고 불리는 한국소 북한보내기나 금강산관광과 자동차현지공장 설립 등 현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투자사업은 현재 노정되고 있는 걸림들만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만 있다면 적실성과 시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남북경제협력이 부진한 이유는 북한탓도 크지만 한국정부탓도 없지 않다. 종전까지 한국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의 선결과제

- 36) 대북한 상품교역의 중개지로는 홍콩,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의 중개에 의한 교역은 남북교역총량의 90%를 상회하며 홍콩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1991년 이후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1992년 8월 한중수교로 중국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오승렬,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통일연구논총』, 제2권 2호, 1993, 173면.
- 37) 안석교, “남북한 경제교류의 당위성과 접근방식”, 『북한연구』, 1994, 여름호, 8면 ; 송태수, “북한경제의 실패와 대외개방에 대한 전망”, 『김일성사후 북한의 정책변화 전망』, 제7회 통일문제학술세미나, 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1994, 42면.
- 38) 북한 당국이 남북경협에 이북인사를 우대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94. 9. 5., 11면.

로 당국자협의우선원칙을 내세웠을뿐 아니라 이를 통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공세적 통일전략을 공공연히 내비추었다. 그뿐 아니라 1994년 북핵위기시기에 적실성과 시의성을 지닌 확고한 통일정책을 구상하여 실행치 못하였고 그로인해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적 일관성과 연속성을 결여하면서 우왕 좌왕하는 정책적 우(愚)를 범하였다.³⁹⁾ 북한이 공식적인 접촉은 거부하고 비공식적이고 사(私)적인 접근만을 수용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⁴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초기적 접근 방법으로 당국자접촉은 지양하고 민간기업의 진출과 투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즉 남북경제협력을 전략적 차원에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 나가자는 것이다.⁴¹⁾

4) 제도적 경험보장장치의 마련

일단 남북경제협력의 물꼬가 제대로 트이면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협정 그리고 청산계정 및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협정 등 제도적 경험보장장치가 체결되어야 한다.⁴²⁾ 투자보장등이 이루어져야 기업들이 마음놓고 북한에 들어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에 일조를 하고 한국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득을 얻어 내기 위해선 북한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기업활동은 자제되어야 하며 정치적 공세로 비쳐질 수 있는 정부당국의 설익은 통일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도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해도 경제교류가 본격화하기까진 투자보장협정체결 등 제도적 경험보장장치마련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으므로 사업추진은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국익을 해

39) 박영호, 「북·미합의 이후의 남북한 관계」, 『남북한 관계 현황 및 95년 정세전망』, 제 1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민족통일 연구원, 1994), 13면.

40) 물론 북한당국이 민간차원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원하는 이유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를 남북접촉의 주대상자에서 빼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자들은 한국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교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선 한국정부와 민간교류집단 및 개인들을 이간질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

41)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대외개방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럴경우 북한의 대미, 대일, 내중, 대러시아 경제협력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경제파트너로서의 의미와 중요성이 감소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내세워 경제외적인 문제, 다른말로 하자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의 정책적 운신의 폭은 그에 상응하여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송태수, 「앞의 글」, 1994, 43면.

42) 북한도 정치적 불안정, 통신, 항만, 전력 등 기간 사회간접자본의 미흡, 법, 제도적 장치의 미비, 협소한 북한의 내수시장, 대외채무지불지연문제 등으로 외자유치가 서조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투자환경을 개선키 위해 투자유치법령의 세정과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은 경제특구지정 이후 1992년 10월 외국인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및 합작법을 제정하고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한데 이어 1994년 4월 자유경제무역항구법까지 총 16개의 투자유치관련법령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남궁영, 「북한의 외자유치정책 운용실태와 성과분석」, 『통일연구논총』, 제 3권 1호(1994), 54-55면.; 그리고 최근에 제정 또는 개정된 북한의 외자유치관련법은 적용대상의 범위에 외국의 법인 및 개인과 함께 「공화국(북한)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경제교류나 협력에 있어서 합영법 제정당시와는 변화된 북한의 대남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최수영,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1994), 83면.;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사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따른 시의성을 활용해 북한과의 투자보장협정 등을 체결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와 김일성사후 조분사절문제 등으로 정부간 접촉의 어려움은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남북의 정부간접촉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이며 일관성있게 일을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남북교역에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유인동기의 제공

북한이 남북경협에 미온적이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⁴³⁾ 북한경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진정 북한경제를 지원한다는 인식⁴⁴⁾을 북한당국에 심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전향적 조치를 한국정부에서 취해 신뢰감을 유도해내고 이를 통해 북한이 한국과의 경협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최근 보·혁논쟁에 휘말려 있는 신정부의 “햇볕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선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건이나 제한없이 민간기업의 대북접촉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사항을 보완, 수정 또는 개정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상품반출입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입자동승인품목인 경우에는 갑류 외국환은행장의 반출입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수출입제한승인품목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얻어야 한다.⁴⁵⁾ 그래서 기업 교역종사자들은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소모가 요구되는 제한승인품목의 교역을 회피하고 있다.⁴⁶⁾ 이것이 의미하는바는 기업들이 홍콩 및 중국 등의 중개자나 자기기업의 해외 지사를 통해 경제적 이윤이 기대되는 경우 정부의 통제를 피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허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한 승인을 기업에 따라 차별화할 경우 특혜시비도 일어날 수 있다.⁴⁷⁾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방지할 경우 높은 거래비용과 비생산적 이득추구행위⁴⁸⁾로 인한 비효율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남북간 경제교류에 부정적 영향⁴⁹⁾을 끼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유관된 법적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여 규제위주에서 탈피한 전향적인 정책(예를 들면 안보 상황과 무관한 품목에 대해서는 승인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거나 승인자체를 폐지)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북한과의 직교역을 증대시키는 유인동기를

43) 안석교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석교, “앞의 글”, 1994, 8면.; 또한 송태수도 우리정부의 대북한 경제정책은 강경보다는 보다 유화적이고 신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송태수, “앞의 글”, 1994, 42면.

44) 이러한 인식의 진화를 위해서는 대북한 경제협력의 ‘주는자와 받는자’의 관계 또는 시혜자와 수혜자의 구도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남북경협을 경제외적인 문제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한국측이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북한측에 인식시켜야 한다. 동용승, “통일과정과 남북경협”, 『삼성세계경제』, 1994, 9월호, 24면.

45) 오승렬, “남북경협 추진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분의 역할”, 『통일연구논총』, 2 (2), 민족통일연구원, 1993, 175면.

46) 오승렬, “앞의 글”, 1993, 176면.

47) 오승렬, “앞의 글”, 1993, 184면.

48) A. O. Kruge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69 (3), 1974, pp. 509-514.

49) 이와같은 행위로 인한 부정적 과급효과는 첫째, 밑수와 같이 법적 규제를 우회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불법행위를 유도할 수 있고 둘째, 이 조치를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이 존재할 경우 이들은 규제조치의 손실을 위해 비생산적 로비활동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이에 따른 이득획득을 위해 비생산적인 이득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ies)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J. Bhagwati, “Directly-unproductive Profit-seeking Activ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2, p. 17.; A. O. Krugen, *op. cit.*, 1974, pp. 509-514.

우리기업들에게 줄뿐 아니라 북한의 개방도 이끌어 내게 될 것이다.⁵⁰⁾ 그리고 현재의 남북 교역도 이러한 시각에서 전향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9년 이래 1997년 10월까지 교역실적은 통관기준으로 총 15억1천만 달러이며, 이중 반입이 12억3천만 달러, 반출이 2억8천만 달러에 달했다. 1995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쌀 15만톤(약 2억4천만 달러)을 포함하면 총교역량은 17억5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⁵¹⁾ 그리고 반입과 반출의 비율은 초기에는 10:1의 비율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1996년에는 3:1, 그리고 1997년에는 1.7:1로 반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에 따른 원부자재의 반출증가와 한국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지원하는 중유, 경수로물자 등의 반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이다.⁵²⁾ (표3 참고)

(표3) 남북교역 현황

(’89.10-’97.10. 단위: 천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90	78	21	12,278	4	3	1,187	82	24	13,465
’91	300	50	105,722	23	17	5,547	323	67	111,269
’92	510	81	162,863	63	24	10,563	573	105	173,426
’93	601	77	178,166	97	21	8,425	698	98	186,591
’94	708	83	176,298	267	42	18,248	975	125	194,546
’95	976	99	222,855	1,668	90	64,435	2,644	189	287,290
’96	1,475	125	182,399	1,908	102	69,638	3,383	227	252,037
’97.10	1,579	134	171,953	1,938	110	104,937	3,517	244	276,890
총계	6,293		1,231,189	5,969		283,049	12,262		1,514,238

* 주 : 1995년의 대북 쌀 지원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 「통일백서」, (서울 : 통일원, 1997), 157면.

이것은 남북교역이 반입중심에서 반출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에 따른 원부자재의 반출증가와 한국에너지개발기구가 지원하는 중유, 경수로물자 등의 반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북한의 적자국으로 만드는 부정적 요인 못지않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⁵³⁾ 즉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교역에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유인동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비록 단기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손실을 보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경제협력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경제사정을 호전시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경제난을 완화시켜주고 더 나아가 통일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남북경협이 활성화될때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경제

50) 김규륜, “미국의 대북한관계 개선전망”, 『남북한관계 현황 및 95년 징세전망』, 제1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민족통일원, 1994) 21면.

51) 「통일백서」, (서울 : 통일원, 1997), 157면.

52) 「통일백서」, (서울 : 통일원, 1997), 158면.

53) 남궁영, “앞의 글”, 1994, 25-26면.

수준의 향상으로 한국의 반출이 증대될 것이며 이로 인한 적자보전도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입과 반출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현상태의 남북경제교류를 일관성있게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6) 남북한의 자원공동활용을 통한 시너지적 효과의 기대

남북경제협력이 남북의 자원을 필요에 따라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 상호간의 경제적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게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에 매력을 갖게 하는 방법도 있다. 실질적으로 반입품목들중 철강금속류는 1989년에서부터 1997년에 이르기까지 전체반입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8%나 된다. 이에 반해 섬유류나 화학제품은 12.2%와 1.0%에 불과하다.(표4 참고) 이에 반해 한국의 반출품목들을 살펴보면 섬유류와 화학제품이 48.5%와 25.0%를 차지하고 있고 철강금속류는 1.6%만을 차지하고 있다.(표5 참고) 남북 서로의 비교우위를 접하는 부문간의 상호 교역에 의해 한정된 자원활용의 최적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남과 북은 서로의 경제적 약점을 보완해 주면서 보다 나은 경제적 위상을 갖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남북간의 위탁가공은 한국의 자본 및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 및 자원력이 제대로 결합될 수 있는 부문이다. 이미 국내 민간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가공의 내역과 성과를 본다 하여도 이러한 협력의 가시적 성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노동력은 생각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4) 반입품목 현황

(’89.10-’97.10. 단위: 천달러)

연도/품목	농림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섬유류	화학제품	기계전자	경수로 물자	기타	계
’89-’90	5,345 (17.3)	566 (1.8)	2,693 (8.7)	19,602 (63.4)	1,515 (4.9)	-	-	-	1,212 (3.9)	30,933 (100)
’91	4,600 (4.3)	3,053 (2.9)	6,619 (6.3)	86,046 (81.4)	1,588 (1.5)	1,672 (1.6)	-	-	2,144 (2.0)	105,722 (100)
’92	10,435 (6.4)	5,085 (3.1)	14,579 (8.9)	125,416 (77.0)	3,683 (2.3)	1,248 (0.8)	-	-	2,417 (1.5)	162,863 (100)
’93	9,674 (5.4)	878 (0.5)	1,371 (0.8)	154,263 (86.6)	8,945 (5.0)	663 (0.4)	-	-	2,372 (1.3)	178,166 (100)
’94	12,061 (6.8)	2,723 (1.6)	1,448 (0.8)	136,340 (77.3)	18,500 (10.5)	954 (0.6)	-	-	4,272 (2.4)	176,298 (100)
’95	17,768 (8.0)	2,692 (1.2)	3,001 (1.3)	165,590 (74.3)	28,852 (13.0)	56 (-)	15 (-)	-	4,881 (2.2)	222,855 (100)
’96	12,055 (6.6)	9,599 (5.3)	1,750 (1.0)	107,611 (59.0)	45,039 (24.7)	73 (-)	1,800 (1.0)	-	4,472 (2.5)	182,399 (100)
’97.10	9,665 (5.6)	12,537 (7.3)	257 (0.1)	89,082 (51.8)	42,451 (24.7)	7,559 (4.4)	3,167 (1.8)	2,736 (1.6)	4,499 (2.6)	171,953 (100)
계	81,603 (6.6)	37,133 (3.0)	31,718 (2.6)	883,950 (71.8)	150,573 (12.2)	12,225 (1.0)	4,982 (0.4)	2,736 (0.2)	26,269 (2.1)	1,231,189 (100)

※ 주 : 농림산물에 한약재 포함. ()내는 구성비율.

자료 : 「통일백서」, (서울 : 통일위, 1997), 159년.

(표5) 반출품목 현황

(‘89.10-’97.10. 단위: 천달러)

연도/품목	농림수산물	섬유류	기계전자	화학제품	철강금속	경수로 물자	기타	계
‘89-’90	-	69 (5.5)	1,094 (87.1)	83 (6.6)	-	-	10 (0.8)	1,256 (100)
‘91	1,607 (29.0)	25 (0.5)	447 (8.1)	3,468 (62.5)	-	-	-	5,547 (100)
‘92	64 (0.6)	496 (4.7)	22 (0.2)	7,932 (75.1)	1,957 (18.5)	-	92 (0.9)	10,563 (100)
‘93	6 (0.1)	6,274 (74.5)	463 (5.5)	1,096 (13.0)	34 (0.5)	-	552 (6.6)	8,425 (100)
‘94	151 (0.8)	12,856 (70.5)	39 (0.2)	1,349 (7.4)	243 (1.3)	-	3,610 (19.8)	18,248 (100)
‘95	865 (1.3)	38,793 (60.2)	1,806 (2.8)	11,567 (18.0)	1,559 (2.4)	-	9,845 (15.3)	64,435 (100)
‘96	3,162 (4.5)	42,396 (60.9)	3,351 (4.8)	14,603 (21.0)	103 (0.1)	-	6,023 (8.6)	69,638 (100)
‘97.10	7,974 (7.6)	36,413 (34.7)	3,538 (3.4)	30,629 (29.2)	586 (0.6)	14,030 (13.4)	11,767 (11.1)	104,937 (100)
계	13,829 (4.9)	137,322 (48.5)	10,760 (3.8)	70,727 (25.0)	4,482 (1.6)	14,030 (5.0)	31,899 (11.3)	283,049 (100)

※ 주 : 농림산물에 한약재 포함. ()내는 구성비율.

자료 : 「통일백서」, (서울 : 통일원, 1997), 160면.

7)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동반자라는 점의 인식과 장기적 경협자세 견지

한국이 북한의 신뢰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동반자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은 낮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⁵⁴⁾이나 또는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도 과감히 진출하는 상징적 활동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향적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남북경협이 남북문제해결의 만능약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한국의 배려와 북한의 호응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구걸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은 본질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경협에 조급하게 연연한 나머지 북한의 인권등을 묵인하고 활말을 하지 못하는 처사등은 과감히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아직 북한의 정치체제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장고하면서 모든 사태와 상황에 대비하는 소신있고 장기적인 대북경협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당국의 변화와 주변4강의 남북경제협력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항상 변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은 피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강상태에 빠져있는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경제협력을 다시 활성화시켜 북한 스스로 개방화의 길을 자연스럽게 걷고 더 나아가선 자생력을 갖도록 하여 향후 다가올 경제적 통합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정

54) 경수로 지원사업은 기업이윤측면에서 커다란 이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상징적 의미가 크고 대북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치적 의미를 떠나서라도 이러한 경제적 통합의 의의는 현재와 같은 국제환경에서는 남북한 모두 필요로 되는 접근이다. 북한 역시 기존의 폐쇄적인 경제체제로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에도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으므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잇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한국과의 교류와 경제협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도 한국에너지개발기구에서 현재 진행중인 경수로건설비용분담에서 한국이 전비용의 거의 80%이상을 감당해 내야 한다는 냉엄한 현실속에서 진정 북한의 궁핍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 분쟁소지가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민족내부거래화 인정

아직은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나 세계무역기구 등이 관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남북간 교역물량이 늘어나고 세계경제전쟁이 더욱 가열되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정책당국이 남북경제협력에 있어 세계무역기구체제 또는 국제사회간의 갈등⁵⁵⁾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들로부터 민족내부거래를 인정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EC에 가입할때 동, 서독간의 경제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은 바 있는데 이것은 독일이 가지는 외교적 역량의 커다란 개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사항은 남, 북한간에 이미 합의를 본 사항이므로 남북문제라기 보다는 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 교역국들과 해결을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경제협력은 그 자체로 불 때는 경제행위이지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불 때는 또 다른 의미의 통일문제와 연관이 된다는 점과 민족자결권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⁵⁶⁾을 활용하는 방안이며, 둘째, 독일의 선행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그것을 설득의 논리와 내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세계 각국이 우리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통일의 지름길이며 그 과정이기도 한 이러한 긍정적인 남, 북의 노력에 협력하거나 적어도 반대나 방해는 안해야 됨을 우리의 외교역량을 동원해 주시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내부거래가 국제법상 민족자결권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불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기본합의서의 관련규정이 갖는 의미는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교류, 즉 기본적으로 국내거래임을 명시한 것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관련규정은 남북교역에 관한 민족자결권 행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으로서의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교류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민족자결

55)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남, 북은 국제법상 독립국가로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교역은 국제교역으로 이해되어 상호관세를 물게되어 있으나 남북당국은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하여 무관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세계무역기구체제나 세계 교역국들과 갈등과 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56) 세성호,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교류성 인정문제: 「자결권」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197-198면.

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하겠다.⁵⁷⁾ 더욱이 남북한의 정부대표가 민족의 이름으로 만나 통일과정을 논의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서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교류로써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합의가 남북한내에서 각기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북교역관련규정이 민족자결권의 행사라는데 아무런 이의도 있을 수 없다. 새롭게 출범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은 물론 전 국제사회가 이러한 합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되며 민족자결권의 존중은 지금까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분단국 내부교역에 대해 보여준 관행과 일치하는 것⁵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제3국은 물론 세계무역기구도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교류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 그렇게 할 경우 이는 종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행에도 부합되지 않을뿐 아니라 한민족의 자결권행사를 존중할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다.⁵⁹⁾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의연하게 강조하는 한편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교역성을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부당한 요구를 저지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남북한간의 직교역을 활성화, 제도화시켜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족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독일의 선행사례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9) 남북경제협력관련 정부조직의 정비와 쇄신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효율적인 결정과 집행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창구의 일원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부처간의 다양한 이견들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만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관련 정부조직을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⁶⁰⁾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면 정책일관성의 실종, 부처이기주의나 업무협조실패 등으로 경제협력의 효율적 달성을 이루어 낼 수 없다.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재정경제부, 국방부 등 여러 유관기관들의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협 초기에는 통일부로 단일창구화하고 여기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며 각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관료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필요하다면 그 하부구조에 실무전담반을 구성하여 세부지침이나 전술들을 개발, 평가하는 일을 전담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실제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단계가 되면 그때가서 남북경제협력의 주도권을 재정경제부에 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

57) 제성호, "앞의 글", 1994, 197-198면.

58) 동서독간의 교역과 관련하여 1951년 구서독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입을 위한 가입의정서체결시 동 의정서내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협정상의 최혜국대우의무면제의 유보를 받은바 있다.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결국단은 "서독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으로 독일산물품의 내독간 교역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는 규정이나 현재의 교역상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내국간 거래성을 승인하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동서독의 경우 내독간거래의 국제적 공인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복잡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다. 내독간 거래에 관한 이와 같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선례는 분단국인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많다. 제성호, "앞의 글", 1994, 194면.

59) 제성호, "앞의 글", 1994, 197-198면.

60) 『중앙일보』, 1994. 11. 3., 6면.

안을 강구하는 이유는 초기단계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이 단지 남과 북의 경제행위만은 아니며 통일정책과 결코 유리될 수 없기 때문이며 활성화단계가 되면 교역규모나 내용에 있어 경제적 논리에 따른 해법이 보다 필요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글을 마무리하면서

세간에는 통일과 남북경제협력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역기능이나 후유증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으나 통일과 남북경제협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순기능적이고 바람직한 면도 많음을 부인 할 수는 없다. 최근 한국방송공사(KBS)의 대담토론에 참여한 레이크(Anthony Lake)도 한반도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손익계산에서 실(失)보다 득(得)이 많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4자회담이라는 큰 틀과 작은 틀로서 남북경제협력을 북한이 미온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해서 초조해 하거나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고 북한경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한 여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경제협력에 있어 선택의 폭을 넓게 갖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한국정부가 진정 북한경제를 지원한다는 인식을 북한당국에 심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대북한 경제협력을 '주는자와 받는자'의 관계 또는 '시혜자와 수혜자'의 구도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남북경제협력을 경제외적인 문제해결의 지렛대(political leverage)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한국측이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북한측에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전향적 조치를 한국정부에서 취해 신뢰감을 유도해 내고 이를 통해 북한이 한국과의 경험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련법들에 대한 전향적 개정, 보완, 수정이 조심스럽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전향적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남북경제협력이 남북문제해결의 만능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한국의 배려와 북한의 호응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와 명분에서건 구걸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은 본질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쌀지원에서도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도 않고 지나치게 정치적 논리에 입각해 서두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 일말의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민의 자존심에 명만 들게 하는 정책적 우(愚)를 범하였다는 지적이 비등했던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경험에 조급하게 연연한 나머지 북한의 인권 등 잘못된 점들을 묵인하고 할말을 하지 못하는 처사 등은 과감히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위에서 제기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정책적 방향에 대한 고려이외에 아직 북한의 정치체제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장고하면서 모든 사태와 상황에 대비하는 소신있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대북경협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97년 10월에 당총비서에 추대된 후 최근에 주석직을 포기하였지만 군사위원회위원장으로 북한의 최고통치권자로 부상하여 자리를 굳힌 김정일 등 북한지도부의 변화와 주변 4강의 남북경제협력을 둘러싼 역학관계, 그리고 세계경제환경의 구도가 항상 변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은 피하고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남북경제협력 더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의 민족적 대업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치, 외교, 경제, 사회적 인 역량을 키우는데 국민적 힘을 결집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규륜. (1994). 미국의 대북한관계 개선 전망, 『남북한관계 현황 및 95년 정세전망』, 제 1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민족통일연구원.
- 김영신. (1992).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북한연구』, 3 (4).
- 김철수. (1994). WTO체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미래의 세계』, 제33호.
- 남궁영. (1994). 북한의 외자유치정책 운용실태와 성과분석, 『통일연구논총』, 3 (1), 민족통일연구원.
- 남궁영. (1994). 북한의 대외경제정책과 남북경제협력 전망, 『남북한관계 현황 및 95년 정세전망』, 제1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민족통일연구원.
- 남궁영. (1993). 남북한 경제력 비교연구, 『통일연구논총』, 2 (2), 민족통일연구원.
- 농림수산부. (1994). 세계무역기구출범이후의 농정대책, 『중앙일보』, 10. 30.
- 대한무역진흥공사. (1994). 『미-북한 경제관계개선전망과 영향분석』,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동아일보』, 1998. 8. 26. 『동아일보』, 1994. 8. 9. ; 10. 12. ; 11. 17.
- 동아일보사. (1991). 개방으로 내몰린 북한경제력, 『신동아』, 서울: 동아일보사.
- 동용승. (1994). 통일과정과 남북경제협력, 『삼성세계경제』, 9월호.
- 박동환. (1992). 남·북군사협상과 한·미안보협력의 방향, 『국방논집』, 제17호. 『세계일보』, 1991. 8. 7.
- 박영호. (1994). 북·미합의 이후의 남북한관계, 『남북한관계 현황 및 95년 정세전망』, 제 1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민족통일연구원.
- 박재규. (1992). 새로운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위상, 『전환기의 위상』, 서울: 나남.
- 배진영. (1993). 경제통합의 속도와 시기: 투자지원액접근,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송태수. (1994). 북한경제의 실태와 대외개방에 대한 전망, 『김일성사후 북한의 정책변화 전망』, 제7회 통일문제학술세미나, 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 신창민. (1992). 통일비용의 추정, 평통자문위원회의 발표논문, 8월.
- 안석교. (1994). 남북한 경제교류의 당위성과 접근방식, 『북한연구』, 여름호.
- 알렉산더 제빈(Alexander Zhebin). (1993). 평화정책의 재개: 대북개방유도방안,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초빙강연.
- 에머슨(Tony Emerson), 『뉴스위크』, 1998. 9. 2. 통권 344호
- 연하청. (1993). 북한의 개방전망과 남북한 경제통합, 『통일로』, 8월호.
- 오승렬. (1993).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통일연구논총』, 2 (2), 민족통일연구원.
- 이동복. (1991). 북한급변은 전민족의 재앙, 『월간조선』, 8월호.
- 이병철. (1994).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정책적 대안 연구, 『사회과학논집』, 4 (1), 울산대학교.
- 이병철. (1991). 북한잡지를 통해 본 북한사회변화 추세연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논문집(IV)』, 서울: 통일원.
- 이상만. (1993).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통일비용의 접근방법.
- 이상만. (1992). 92년 북한의 개방화와 남북경제협력전망, 통일. 민족통일협의회, 3월.

- 이영선. (1992).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통합의 효과: 통일비용과 이득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1월.
『조선일보』, 1998. 8. 26. ; 8. 27. ; 8. 28. ; 9. 22.
『조선일보』, 94. 9. 5. ; 9. 9. ; 11. 6. ; 11. 14. ; 11. 17. ; 11. 18.
- 채성호. (1994).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교류성 인정문제: 『자결권』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3 (1), 민족통일연구원.
- 조재호. (1994). 남북한 경제정책비교와 통일전망, 『사회과학논집』, 4(1), 울산: 울산대학교.
『중앙일보』, 94. 11. 3. ; 11. 17.
『주간조선』, 1998. 9. 3.
- 찰스 크라우스햄머(Charles Krauthammer). (1994). 미-러신세력권 형성, 『세계일보』, 11. 5.
- 최수영. (1994).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논총』, 3 (1), 민족통일연구원.
- 통일원. (1997).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 통일원. (1994).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 통일원. (1993).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 통일원. (1992). 『'92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 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0년이후 각 연도판.
- 통일원. 『북한경제 종합평가』, 각년도.
- 통일원. (1992). 『남북경제교류협력실무안내』.
- 한국개발연구원. (1991). 『남북한 경제관계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총괄보고서』, 9월.
『한국은행』. (1993).
『한국일보』, 1991. 7. 30. ; 8. 8.
- 허문영. (1994). 북한지도부의 정세인식과 대외개방 전망, 『통일연구논총』, 3(1), 민족통일연구원.
- 홍성후. (1992). 북한지도자들의 성격분석과 북한의 핵개발정책, 『국방논집』, 제17호.
- Bhagwati, J. (1982). Directly-unproductive Profit-seeking Activ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994).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1. 29.
- Drucker, Peter F. (1993).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Business.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4. 11. 3.
- Friedman, George and Meredith Lebard. (1991). *The Coming War with Japan*. New York: St. Martin's Press.
- IISS, (1990, 1991). *The Military Balance 1990-1991, 1991-1992*, London: IISS.
- Krugen, A. O. (1974).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69 (3).
- Ok, Tae Hwan. (1992). The Process of South-North Dialogue and Perspectives for Unification of Korea.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1.
- Rosecrance, Richard. (1986).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New York: Basic Books,

Inc.

- Rosecrance, Richard and Arthur Stein. (1973). *Interdependence : Myth or Reality. World Politics*. July.
- Stewart, Michael. (1984). *The Age of Interdependence*. Cambridge, Mass.: MIT Press.
- Thurow, Lester. (1992). *Head to Head :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 USA TODAY*, 1998. 8. 31.
- Waltz, Kenneth. (1970). "The Myth of National Interdependence", in Charles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한반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한 논평

나호수
한국해양대

‘한반도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논문에서 발표자는 한반도 경제여건변화로 세계적인 경제통합의 확대,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약화, 북한경제의 파탄상태 등을 지적하고 있고, 이러한 난국을 남한과 북한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남북간의 경협 확대가 바람직하고 절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이에 추가하여 최근까지 전개되어 온 새로운 변화는 본 논평자의 견해로는 첫째, 남북한 모두 98년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새로운 통치자의 출현이다. 남한은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였고, 북한은 김정일이 북한의 확고한 통치자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또한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최근 남북한의 경제상황이 과거에 비해 극도로 열악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세계경제의 복합적인 불황상태가 가중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국가의 경제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태국 등 과거 아시아경제의 추진력 역할을 해온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동인을 제고한다. 남북한이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남북경협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평자도 발표자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협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발표자는 1.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능동적이고 전향적으로 적응하고, 2.북한의 한국배제전략에 대해 외교대응역량을 강화하고, 3.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를 통한 해법을 찾고, 4.제도적 경협장치를 마련하고, 5.남북교역에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유인동기를 제공하고, 6.남북한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얻고, 7.한국이 북한의 동반자라는 신뢰감을 인식시키고, 8.국제사회에 남북거래가 국가내부거래임을 인식시키고 남북한 경제협력조직을 정비하고 쇄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논평자의 견해로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햇볕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 방안 중 가장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여러 대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교역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생존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즉, 개방=체제붕괴가 아니라 개방=체제생존이라는 신뢰감형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남북한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교역은 상호경제에 이익을 발생시키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실제 정책을 시행할 때도 상호 이익이 발생하는 분야부터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북한정책에 대한 의견조율에 있어 미국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벗어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실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국민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의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었는지 미국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간 것이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한반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한 논평 :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최병철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국민의 정부는 이른 바 ‘햇볕정책’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확대해 나간다는 대북정책의 기초에 따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제 45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1998.4.30)에서 의결하였다.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의 기본방향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 민간 주도의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며, 정부는 과당경쟁방지 등 경협 추진 여건조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활성화 조치의 내용으로는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 투자제한 업종의 네거티브 리스트화,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 허용 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렇게 남북교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였지만 최근 남북교역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IMF로 인하여 남북경협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1. 남북교역 규모의 감소

1997년 3억 800만달러에 달했던 교역규모는 금년들어 지난해의 절반 수준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98년 1-6월 중 남북교역 실적은 7천7백만달러로 전년동기의 1억4천5백만달러에 비해 46.5%가 감소하였다. 특히 반입이 67.0% 감소하였다. 이는 IMF 사태로 인한 외화난으로 주력반입 품목이었던 금괴, 아연괴 등 철강금속제품의 반입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탁가공 교역실적도 3천만달러고 전년동기 3천6백만달러에 비해 16.0%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교역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환율상승과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교역여건이 악화되어 북한 물품의 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1년-97년까지 7년동안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연평균 약 1억 4천만달러의 흑자를 보아 왔으나 IMF 체제 이후 남북한간 교역여건 악화로 흑자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금년 상반기를 166만달러의 흑자에 그쳤다.

2. 남북한 투자협력의 부진

1998년 8월말 현재 총 36개의 기업이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 받았고, 이 가운데 총 10개 기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실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력, 한국통신, 외환은행 등의 경수로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투자협력은 대우의 남포공단사업(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사업)만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5건의 경제협력사업자를 승인하고 3건의 경제협력사업을 승인하였다. 또한 대기업 총수의 방북을 허용함에 따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현대는 그동안 추진해온 금강산 종합개발 사업을 확정짓고, 석유공동개발 사업 등 9개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해 경협 협의를 위한 기업인 방북의 길을 넓히고, 경협사업에 대해서도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남북경협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 (1)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은 지속될 것인가? 혹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정경분리 원칙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남북한간에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그동안 남북한에 지속되었던 적대적 공존관계보다는 새로운 평화적 공존, 협력적 공존관계를 수립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경분리란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질서수립이 전제되어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경분리 하에 기업의 자율성이 우선시 된다고 하지만 남북경협이 남북관계를 전혀 도외시 한채 추진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 (2) 민간자율에 따른 부작용 즉 과당경쟁,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과 관련하여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대북 진출에 있어서 경제성을 따지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선점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과열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남북경협에 참가하는 기업이 양산될 소지가 있다. 한편 민간자율의 경험은 대북투자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간자율의 남북경협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으로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민간자율에 따르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협전담 민간기구의 설립을 들 수 있다. '남북민간경제교류협의회'(가칭)로서 민간기업 자율에 따르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제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대북협상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조정, 정부기관과의 협의, 대북협상의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중소기업 대북전문교역·투자업체로 구성된 '한민족물차교류협회'는 중소기업들의 대북한 무역 및 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북쪽파트너와의 접촉과 선정, 방북 초청장 확보, 상담과 계약서 체결까지 일괄 책임지는 분야별 대북교역·투자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활성화방안으로 몇가지 추가한다면,

1. 중소기업들의 투자 의욕과 투자 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교역과 투자 등 모든 면에서 남북경협의 주역으로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이 대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유망분야가 노동력과 약간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공업 분야로서 중소기업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산업구조조정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시장규모와 폐쇄성, 산업기술발전 단계상 북한의 수용능력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대북투자가 남북한의 상호보완성을 높여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대북사업이 북한의 노동력을 즉시 고용할 수 있고 남한의 유희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2.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육로운송, 품질검사와 기술지도를 위한 기술자 방북, 대금결제, 통신 등 교역제도 마련과 교역여건개선을 위한 남북한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9개 경협사업중 경제특구 개념의 2천만평 규모의 서해안 공단개발 사업은 남북간 교역증대 효과 뿐만아니라 국내산업의 생산기반 강화와 대외투자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감안할 때 국내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되면 남북경협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